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석유산업을 혁신해야 한다”

석유정제산업이 수많은 의문속에 파묻혀 있으나 이를 제대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 국내 석유산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석유산업과 관련한 의문점은 70-80년대를 풍미했던 석유사업기금이 그렇고, 석유정제 및 LPG, LNG 도입 및 결산상의 비효율성과 의문점, 석유제품 유통과정상의 문제, 폴사인제 도입에 배치되는 휘발유 섞어팔기, 휘발유의 벤젠 및 옥탄가 함량기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등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이다.

현대정유와 한화에너지가 막대한 부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5대 정유기업의 사업실적 결산방식이 어느나라에도 없는 회계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휘발유의 오염물질 함량 강화안의 시행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1-3년 연기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석유사업기금은 7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갖가지 의문점이 나타나고, 사용처에 대한 별의별 의혹이 제기됐지만 속시원한 해답은 아직까지 한번도 제시된 적이 없다. 「석유사업기금 백서」를 발간하면서까지 여러번에 걸쳐 해명한 것은 사실이나, 80년대말 수조원에 이르렀던 기금이 오늘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최근 국민회의 박광태의원이 제기한 「해외 석유개발사업 투자의 비효율성」도 석유사업기금과 관련해 명확히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광태의원은 대한석유개발공사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까지 원유 소비량의 10%를 독자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석유개발공사와 SK(유공), 삼성물산, 대우, 현대정유 등이 81년부터 98년6월까지 해외 석유개발사업 88개 프로젝트에 24억4912만달러를 투입했으나 97년말까지 33개 사업은 실패로 종료됐고, 투자액 회수율도 68.4%(16억7402만달러), 수입량 대비 독자 개발량은 1.8%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장했다.

특히, 93년이후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석유개발공사는 총 투자액 5억4620만달러 중 회수율이 44.1%인 2억40 77만달러에 불과하고, 유개공이 96년3월 Texaco로부터 15%의 자산을 인수해 추진하고 있는 북해 「캡틴광구」 개발사업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회수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IMF체제 이후에는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유개공과 재벌기업 상당수가 해외광구 매각, 신규참여 억제 등 사업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막대한 외화가 투입된 해외 석유개발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97년말 현재 유개공 참여 18개, 민간 단독참여 37개 등 55개 사업이 진행중이나 98년 9월말 현재는 50개 사업으로 축소됐고 그중 9개 사업도 사업철수 및 지분매각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박광태의원은 해외 석유개발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주원인으로 해외 석유개발사업 참여기업 대부분이 종합상사, 정유, 건설 등 석유개발과 직접관련이 없어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 대안으로 민간기업 주도에서 유개공 주도로의 전환, 재원확보를 위한 석유개발자금의 확대, 민간의 해외 석유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융자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간의 석유사업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들을 살펴볼 때 유개공은 확대할 것이 아니라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석유개발자금도 확대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하며, 민간 석유개발 촉진을 위한 융자는 개별기업의 의사 및 경영전략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즉, 해외 석유개발사업이 무슨 연유로 아무런 성과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벌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면서 석유개발사업에 온갖 정열을 쏟고 있는 이유를 명백히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답은 석유사업기금, 현재의 석유개발기금에 있지 않은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눈이 멀어버린 기금 또는 세금은 이미 국가재정이 아니라 재벌들의 사금고요, 관료들의 사취대상 이

상은 아니라는 역사적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유 도입 및 석유정제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화학저널 1998/11/2>